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활동을 돌아보며

용혜인 기본소득정치연대 공동대표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위해 모이다

2017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항쟁이 벌어진 지 37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그리고 국정 농단에 분노해 타오르기 시작한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슈가 되어 왔던 개헌이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의제로 한 대중운동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던 기본

소득한국네트워크의 몇몇 청년 회원들은 30년 만에 개헌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사회적 논의가 널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합의하는 개헌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모델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도 함께 힘을 모으지 못했던 지난 시기들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을 모아 내는 것을 목표로 기본소득 개헌운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 17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소득 개헌을 위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뒤인 6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본소득이 포함된 개헌안을 공개했습니다.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워킹 그룹을 형성했던 청년들은 신이 났습니다. 아직 많은 국민이 기본소득을 알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가인권위 개헌안을 보면서 최근 기본소득 논의 확대에 힘입어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이번 개헌 과정에서 완전히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기본소득 개헌운동을 제안한 청년 회원은 다섯 명이었지만, 어느새 워킹 그룹에는 열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기본소득 기본권’에 동의하는 전국의 시민들을 너르게 모으기 위해 전국을 돌며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 기본소득 개헌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발기인으로 개헌운동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7일, 대전, 청주, 전주, 부산, 대구, 인천, 수원, 광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전국을 돌며 '기본소득 개헌'을 설명했다.

주, 목포의 시민들을 만나기 위한 1차 전국 투어를 떠났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서 기본소득 개헌운동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를 불러주셨고 천안, 고양, 창원, 울산, 제주, 서울까지 포함하여 총 15개 지역에서 기본소득 개헌운동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를 불러 주셨고, 생각보다 많은 시민이 설명회 자리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기본소득 개헌운동을 제안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회원들,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한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의 지역 당원들, 그리고 기존에 연결 고리를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분들을 기본소득에 동의한다는 한 가지 공통점을 통해서 만나는 일은 정말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발기인으로

함께하겠다고 힘을 모으는 장면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그리고 온/오프라인에서 총 543 명의 시민이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발기인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 개헌을 지지하는 개인들을 모아내는 것과 함께, 각 단체와 세력이 지지하는 구체적 기본소득 모델을 넘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힘을 모으고 기본소득운동 세력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라는 간단한 명제에 동의하는 단체들을 모아 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많은 단체가 모이지는 않았지만, 제안 단체였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포함해 개혁연대민생행동,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알바노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청년좌파(현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청년초록네트워크, 평등노동사회까지 아홉 개의 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참가 단체로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각 지역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까지 세 개 진보정당의 당원들이 모여 힘을 합쳤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액션을 시작하다

8월 11일, 충북 속리산에 90여 명의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발기인들이 모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사회적 기본권과 헌법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살펴보기도 하고 공유부公有富 배당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공부하기도 하면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기본소득 개헌 요구안’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2박 3



2018년 8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본소득 개헌 기자회견

일간의 공부와 토론의 결과, 개별성과 무조건성이라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기본소득 개헌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계약 자체를 변화시켜야 해방적 의미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고민 속에서 현행 헌법 제32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의 의무”를 삭제하는 것을 기본소득 기본권과 함께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헌안을 가지고 8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기본소득 개헌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기본소득 개헌 주장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액션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기본소득 개헌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국에 294개의 기본소득 개헌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35,000장의 유인물과 6,000부의 소책자를 발행하여 배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캠핑카를 끌고 전국을 다니며 기본소득 개헌을 알리는 분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 결과 전국에서 총 128회의 기본소득 개헌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본소득 개헌에 대해 알렸습니다. 3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만나 기본소득 개헌 요구안을 전달하고 기본소득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통해 발의한 정부의 최종 개헌안에 ‘기본소득 기본권’은 포함되지 못했고, 이 개헌안 역시 여야의 의견차와 이로 인한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 등의 과정을 거치며 2018년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하고자 했던 개헌 역시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4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되었다고 선언하면서 개헌 논의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국적 기본소득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다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 기본권’에 동의하고 기본소득을 의제로 하는 첫 번째 전국적 사회운동의 형성을 기대하며 모여 주셨음에도 불



2018년 3월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기본소득 개헌 요구안을 전달했다.

구하고, 기본소득을 헌법적 권리로 넣자는 커다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데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외부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개헌 과정의 특성상 정치권의 일정과 논의 수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조건 하에서, 이를 극복하고 기본소득 개헌에 대한 사회적 흐름을 형성할 만한 정치력과 조직력을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가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요구들로 개헌운동에 참여한 여러 세력에게 기본소득 개헌을 설득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여러 세력들과의 개헌 연대 전선 형성에 실패했던 것은 매우 뼈아픕니다.

내부적으로는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워킹 그룹 내에서, 기본소득 개헌운동만을 전업으로 맡은 활동가의 부재로 집행력을 일관성 있게 담보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뼈아프고, 이는 기본소득 개헌을 지

지해 주셨던 전국의 많은 발기인분들에게 송구스러운 지점입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상황의 상이함까지 더해져 전국적으로 집중된 개헌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는 발기인이 모였지만, 이들을 오프라인으로 모아 내고 이를 통해 기본소득 개헌 요구에 대한 사회적 힘을 보여 주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시도된 전국적인 기본소득운동인 만큼 몇 가지의 의의 역시 존재합니다. 전국적으로 ‘기본소득 기본권’을 지지하는 500명의 시민들을 모아낸 것과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기본소득 캠페인을 단일한 의제와 요구로 진행한 경험은 앞으로 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작은 씨앗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헌 과정에서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는 기본소득을 ‘기본권 확대’의 맥락에서 요구하는 운동이 등장했고,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이 요구를 전달했으며, 이번 기본소득 개헌 요구가 정부 백서에 남게 된 것 역시 이후 기본소득 기본권 운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 ‘운동’ 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년배당은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을 넘어 광역단체의 수준으로 확장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를 거쳐 ‘농민기본소득’ 역시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기본소득에 대



한 책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출판되고, 공중파 TV 프로그램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며, 국무총리는 주말에 '기본소득'에 대한 책을 읽고 SNS에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언론에서는 매일매일 기본소득에 대한 기사를 발행하고,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일자리 위기와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기본소득을 언급하곤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본소득이 가까워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고유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선별적 소득보장 정책'을 지칭하는 말로, 기존의 의미가 훼손된 채 사용되는 경향 역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제조업이 아닌 데이터 기반 경제로 경제체제가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계약마저 형해만 남아 있는 지금, '모두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조건부 소득보장 정책' 혹은 '사회수당'의 성격을 지닌 소득보

장 정책이 아니라, 공유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그리고 임금노동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기본소득,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계약이 아닌 새로운 사회계약의 내용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기본소득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기본소득 개헌운동을 돌아보며, 어려운 일이지만 끊임없이 기본소득 ‘운동’을 구성하고 기획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합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많은 분이 이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시더